

---

# 기후비상사태 대응 정책 제안서

---

**GREENPEACE**

## ■ 지금은 기후비상사태, 신속한 행동이 필요

-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 없으면 8년 후 파국적인 기후 재앙 초래
  -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이제 이론의 여지 없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
    - 7월까지 출판된 11,602개의 학술논문 중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부정 논문 없음
  - 수만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온 기후시스템의 비가역적인 붕괴를 막으려면 80년 후(2100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 필요
  -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지속하면 불과 8년 후 1.5도 초과 예상
    - 30년 뒤 부산·제주는 현재의 이란과 비슷한 기후가 되고, 극한 기상 재해 급증
  - 따라서, 지금은 전시(戰時)에 준하는 미증유의 기후위기 상황임
    - 산업혁명 후 1도 오른 상황, 인류는 2도 이상 오른 상황의 생존 경험 없음
  - UN·과학계는 빠른 감축 통해 2050년 탄소 순배출제로(net-zero) 권고
    - 모든 부문(에너지·건물·수송·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환 필요

## ■ 주요 선진국과 세계 시민은 이미 행동하기 시작

- 주요 선진국, 잇달아 기후비상 선언하고 탄소제로 목표 수립
  - 영국(5월)을 시작으로 캐나다·프랑스·아일랜드 의회 기후비상사태 선언
    - 주요국 탄소제로 목표연도 : 노르웨이('30), 핀란드('35), 스웨덴('45), 영국·프랑스·스위스·덴마크·스페인·뉴질랜드·포르투갈('50) 등
  - 유럽의회 '기후·환경 비상' 결의안 채택(11월 28일)
  - 12월 현재 26개국 1,246개 지자체 기후비상사태 선언
- 150개국 6백만 명 세계 시민,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위에 참여
  -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가 촉발한 '기후파업' 이 전 세계로 확산
  - 153개국 1만 1,000명의 과학자가 기후비상선언 발표

## ■ 기후위기 적극적 대응 없이 한국 경제 경쟁력 상실

-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 글로벌 기후대응의 최우선 순위는 석탄발전의 시급한 감축
    - 주요국 탈석탄 목표연도 : 프랑스('22), 영국이탈리아('25), 캐나다덴마크('30), 독일('38)
  - 주요 선진국들은 석탄·원전 비중 줄이며 재생에너지 확대
    - ('00~'18) 영국: 석탄 35% ⇨ 5%, 원전 23% ⇨ 19% 태양광·풍력 0% ⇨ 21%
    - 독일: 석탄 53% ⇨ 37%, 원전 29% ⇨ 12% 태양광·풍력 2% ⇨ 24%
- RE100 대응 늦으면 기업의 심각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 RE100\* 가입 기업 219개 돌파, 평균 RE100 목표연도는 2026년
    -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 RE100 기업들의 평균 RE 비중 38% (2017), 100% 달성 기업도 이미 20여 개
  - RE100 기업들은 협력업체에게도 RE 전력 사용하여 부품 납품 요구
    - 애플 ⇨ 삼성전자·LG화학·SK하이닉스 등, BMW ⇨ 삼성SDI·LG화학
  - 신용평가기관도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주주·소비자·시민단체의 기업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음
  - 특히, 최근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

## ■ 특단의 '그린뉴딜' 정책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활용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행동은 “기후악당” 수준
  -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크고, 행동은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
    - 연간 CO2 배출량 7위, 누적배출량 17위, 1인당 배출량 최고 수준
    - BAU 대비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는 3~4도 상승 시나리오에 기여
  -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 발전은 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부족함
- 화석연료에 기반한 성장 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도입 필요

\* 제안 별 구체적인 내용, 시행 전략 등에 대해서는 추가 문의 바랍니다.

## 1. 기후비상사태 선포

○ 화석연료에 기반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었음. 유엔환경계획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7.6%씩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음. 이는 기존의 점진적인 변화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임. 최우선적으로,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현재 얼마나 비상 상황 인지를 사회에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음

⇒ 국회 본회의 기후비상사태 선언 및 결의안 채택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산업·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 정례화

##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2030년까지 37% 감축)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는데 매우 불충분한 목표임. 선진국과 같이 절대량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목표 설정에 있어 기후 재앙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축을 목표로 삼아야 함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 수준 대비 50% 이상 설정

⇒ 최대한 빠른 시기에 탄소순제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3. 탄소세 도입

○ 탄소세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면서 가장 강력하며 비용 효과적인 수단임. 스웨덴의 경우 탄소세 도입 통해 1990년 대비 온실가스는 26% 감축하면서 경제는 78% 성장함. IMF는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최소 톤당 75달러의 탄소세 도입을 권고함.

⇒ 배출권거래제 폐지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포함하여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편 추진

### 4.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 및 전력망 개선

○ 현대사회에서 전기 사용은 필수적이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는 비재생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를 사용해 생산 중임. 발전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석탄화력발전 퇴출, 재생에너지 (주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 확대,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성 강화 방안 (다양한 재생에너지 믹스, 양수발전, ESS, P2G, V2G, VPP, DR, 바이오매스 발전, 수소연료전지, 기후예측기술 등)을 통한 전력망 안정성 제고 등이 핵심임.

⇒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까지 전면 퇴출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조기달성 및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계획 재설정

⇒ 최대한 빠른 시기에 탄소순제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 검토해 계획 마련

⇒ 한국전력, 발전5사, 전력거래소의 경영 목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명문화

## 5. 수송 부문 전기화 및 대중 교통 확충

○ 주로 자동차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실질적인 감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해 최근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함.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100% 전기차 전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 2028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입법화로 전기차 전환 가속화

⇒ 전기차 판매 의무제 도입으로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전기차 개발 및 대량 보급 촉진

⇒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로 충전 관련 우려 해소

⇒ 수소전기차 지원 관련 정책효과 재검토

⇒ 저소득층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추가 지급

⇒ 대중교통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추진

⇒ 디젤 버스 및 CNG 버스 퇴출